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

신욱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동아시아 국제정치 of the 장래는 미중일 사이의 삼각관계의 전망에 따라 좌우된다. 미중일 관계는 각각의 양자관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냉전 이후의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미일관계는 협력에 치우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일관계는 갈등의 가능성을 갖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미중일 관계의 특성과 미래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작업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물질적 측면의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일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관념적 측면의 요인들을 중시하는 민주평화론, 문명충돌론, 탈식민주의론의 내용과 미중일 관계에의 적용 부분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는 물질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위협균형론과 위협전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미중일 관계의 설명에 있어서 위협인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위협전이론의 적실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미중일 관계, 세력균형, 세력전이, 민주평화, 문명충돌, 탈식민주의, 위협균형, 위협전이

I. 서론

2010년대의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의 냉전 이후 안정성에 대한 논쟁(Mearsheimer, 1990; Van Evera, 1990/1991)이나 2000년대의 9·11 이후 제국론(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세계화의 퇴조와 아시아의 세기에 대한 논의라고 할 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 위기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왔고, 이는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세기의 도래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정치경제 모델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수반하게 되었다. 미국의 관료였던 알트만(Altman, 2009)은 시장 자유화를 향한 오랜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국가개입, 재규제, 그리고 점차적인 보호주의의 새로운

*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학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중국모델(the Chinese model)을 언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관료였던 마부바니(Mahbubani, 2008)는 서구의 부상이 세계를 전환시켰듯이 아시아의 부상도 유사하게 세계의 의미 있는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아시아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국제/세계체제의 극성(polarity)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냉전 이후의 다극체제, 9·11 이후의 일극체제의 성격과는 다른 양극체제의 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새로운 체제는 'G2' 혹은 'G20 속의 G2'라고 지칭된다. 이는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지며, 미중 관계가 세계정치의 핵심적인 축으로 기능함을 의미하게 된다. 가렛(Garrett, 2010: 29)은 이러한 변화가 갖는 정책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는 실질적인 중국-미국의 G2 체제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 두 나라 모두의 새로운 공약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인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 대립적인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가 중기적으로 중미 관계의 가장 큰 잠재적인 위협이다.
- 형식적인 G20 속에 실질적인 G2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 G20는 브레튼우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를 감시하기 위한 이사회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정치학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미중 관계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패러다임 분류에 따라 미중 관계를 지배하는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전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프리드버그(Friedberg, 2005)의 글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삼분법을 사용해서 각각의 주요 변수를 고찰하고, 미중 관계의 낙관적/비관적 전망을 비교적으로 제시

한다. 프리드버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갖는 상대적인 비중과 혼합된 영향의 문제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국 학자인 풋(foot, 2009/2010)은 이에 비해서 예외주의, 정치체제, 세력의 이전과 이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변수를 중심으로 고려하면서, 중국의 부활과 그것이 글로벌 규범에 주는 도전에 대한 과장과 잠재적으로 위협스러운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적 측면에 대한 무시가 모두 미중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비교적으로 볼 때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가 갖는 체제적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동아시아이다. 이 지역의 안보적 안정성은 미국의 세계전략 운용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모두 필수적인데, 미국의 학자들은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의미 있는 안보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haplen and Laney, 2007).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분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변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설명을 위해 사용되었던 ‘반응국가(reactive state)’의 개념(Calder, 1988)은 안보 영역에도 적용되어 일본의 정책을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으로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나 냉전 초기의 일본 정책은 어느 정도 자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는 탈냉전기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 따라서 일본 정책의 변수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그가 처해 있는 구조적 제약의 일방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 나름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주체-구조 문제(agent-structure problem)’의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Wendt,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제정치 of 장래는 미중일 삼각관계의 전망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일 삼각관계는 그 자체가 ‘다자주의’의 성격(Ruggie, 1992)을 띠거나 혹은 ‘전략적 삼각관계’의 특성(Dittmer, 1981)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세 국가의 관계가 불가분성에 따라 움직이거나, 일본이 미국에 대해 완전한 정책적 자율성을 갖는 행위자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미중일 관계는 각각의 양자관계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삼

¹ 냉전 초기의 사례를 위해서는 신옥희(2002)를 참조할 것.

각관계의 전망은 각 양자관계의 미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냉전 이후의 미중 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미일 관계는 협력에 치우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일 관계는 갈등의 가능성을 갖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미중일 관계의 특성과 미래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작업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물질적 측면의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일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관념적 측면의 요인들을 중시하는 민주평화론, 문명충돌론, 탈식민주의론의 내용과 미중일 관계에의 적용 부분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는 물질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위협균형론과 위협전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미중일 관계의 설명에 있어서 위협전이론이 갖는 적실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물질적 측면

1. 세력균형론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의 부상이 거론되면서 패권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Russett, 1985; Kennedy, 1987), 냉전의 종언과 정보 혁명의 전개와 함께 곧 수그러들었고, 일본은 이후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권력분포의

표 1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지출

(단위: 백만 달러)

	1989	1994	1999	2004	2009	2010
미국	526,271	415,106	361,885	527,799	668,604	687,105
중국	15,900	19,400	29,800	55,200	110,100	114,300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Yearbook Database
<http://milexdata.sipri.org>(검색일: 2012. 4. 15).

표 2 미국과 중국의 국민총생산

(단위: 백만 달러)

	1989	1994	1999	2004	2009
미국	5,439,600	7,030,500	9,301,000	11,812,300	14,119,000
중국	343,973	559,224	1,083,277	1,931,643	4,985,461

출처: World Bank Database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2. 4. 15).

변화는 그에 비해 좀 더 분명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에 보면 미국의 국방비는 1989년 5,262억 달러에서 2010년 6,871억 달러로 약 30%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159억 달러에서 2010년 1,143억 달러로 약 700% 증가하였다. 더욱이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비가 이 자료의 수치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ce, 2010).

표 2에서 나타나는 국민총생산의 경우 미국은 1989년 5조4,396억 달러에서 2009년 14조1,190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은 1989년 3,439억 달러에서 2009년 4조9,854억 달러로 약 1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골드만 삭스는 2007년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의 국민총생산을 추월할 것으로 보았으나(Goldman Sachs, 2007), 최근 IMF는 그 시기가 2016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하였다(매일경제, 11/04/27). 따라서 최소한 경제력 면에 있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력 변화의 양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

표 3, 4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세력 변화는 좀 더 현저하며, 이미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04년 중국은 군사비 지출이 일본의 지출을 처음 넘어섰으며, 국민총생산은 2010년 일본을 초과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

² 군사비나 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성권력의 변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연성권력의 측면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를 유지시켜온 미국 중심의 관념과 제도, 즉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현재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력 변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erra and Stiglitz, 2008). 물론 이를 대체하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관념과 제도의 등장과 그 확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예로 하퍼(Halper, 2010)를 볼 것.

표 3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지출

(단위: 백만 달러)

	1989	1994	1999	2003	2004	2009	2010
중국	16,600	20,308	31,191	51,955	57,542	116,666	121,064
일본	48,022	52,595	54,385	56,053	55,541	54,339	54,641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milexdata.sipri.org>(검색일: 2012. 4. 15).

표 4 중국과 일본의 국민총생산

(단위: 백만 달러)

	1989	1994	1999	2004	2009	2010
중국	343,974	559,225	1,083,277	1,931,644	4,991,256	5,926,612
일본	2,972,666	4,778,992	4,368,734	4,605,920	5,032,982	5,458,836

출처: World Bank Database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2. 4. 15).국이 된 바 있다.³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권력 분포의 변화가 어떠한 국제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 동일한 세력 변화의 양상에 대해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은 서로 다른 예측을 하고 있다. 세력균형론에서 '세력균형'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명확치 않으나, 이는 때로는 법칙에 가까운 경험적인 현상을, 또는 근대국제정치의 원칙이자 관행을, 어떠한 경우에는 국가들의 정책 목표를 뜻하기도 한다(김태현, 2004). 체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세력균형론은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편승(bandwagoning)보다는 균형(balancing)을 통해 안정을 모색한다고 보며, 국제관계사에서 한 국가의 압도적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반패권 동맹의 등장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세력균형론자인 월츠(Waltz)는 기본적으로 다극체제보다 양극체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중, 혹은 미일 간의 세력이 비슷해지면 국제체제/지역체제의 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세력

³ 연성권력을 통한 지역적 리더십 경쟁에 있어서도 중국이 일본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Lee, 2010).

균형론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로스(Ross)는 탈냉전기 아시아를 기본적으로 양극체제로 규정하고, 해양국가/해군중심의 미국과 대륙국가/육군중심의 중국이 병립하는 지정학적 안정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의 잠정적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지리와 극성의 결합은 지역적 평화와 질서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도 평화와 질서의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국가의 정책들이 불안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지속적인 공헌을 유지할 것, 중국이 제한된 야심을 추구할 것, 또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문제를 평화롭게 관리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지리와 극성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TMD와 같은 21세기형 무기체계가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키고 군비경쟁을 유발하며 양자적, 혹은 다자적인 긴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구조와 지리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질서, 그리고 그에 따른 강대국 협력의 기회 가능성에 대한 더욱 더 큰 확신을 제공한다. ⁴

중일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인 쇠퇴가 지역패권의 공유로 귀결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Yang, 2010). 하지만 중국의 부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 낙관론은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해양대국화에 따른 갈등 가능성 증대의 문제가 지적된다(서정경, 2010; 차도희, 2012).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의 세력전이론의 논의와 연결된다.

2. 세력전이론

세력전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보기에 세력균형론은 국가들 사이의 세력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체제의 전환, 국가들 간의 분쟁 가능성을 적절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동맹의 형성을 통한 국력의 증대라는 가

4 하지만 로스는 한편으로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차상위국가(secondary state)들이 중국에 대해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순응(accommodation)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Ross, 2006).

정은 비현실적이며, 산업화 이후 체제에서의 국력 증대는 동맹관계와 같은 외적인 방법보다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의 위기는 불만족 국가군에 속해 있던 강대국 중 하나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급격하게 신장시키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김우상, 2004). 따라서 세력균형론이 그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변화의 양상에 대해 세력전이론은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세력전이론자인 김우상은 세력전이론을 통한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중국과 같이 급성장하는 불만족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전이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하고(이 글은 2004년에 출판되었음), 미국까지 따라잡게 된다면 이들 두 세력 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두 세력 간의 세력전이 상황, 두 세력 간의 국력균형,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대한 불만족도, 특히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 중 간의 대립, 중국과 일본 간의 조어도(또는 센카쿠 제도)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양자 간의 불만족도 등은 중국과 미일동맹 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전망된다(김우상, 2004: 139).

미국의 세력전이론자들도 미국에 대한 커다란 도전은 테러리즘이나 지역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증대되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이익의 충돌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미중 간의 세력전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Tammen and Kugler, 2006).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미중 간의 세력전이 여부 자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거나, 이 과정이 갈등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쉐(Chan, 2005)는 중국이 국력의 전통적인 척도에 있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을 담보하는 기술과 인적자원의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주(Zhu, 2005)는 원래의 세력전이론의 틀을 확장시킨 국제, 국내, 사회, 정책결정자의 네 가지 분석 수준의 고려를 통해 1990년대 이후의 미중 관계를 분석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잠재적인 세력전이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

고 있다. 중일 간 세력전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의 가능성은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 영향력에 의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강택구, 2008).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력균형론보다는 세력전이론의 예측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면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추세에서 2010년이 갖는 전환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즉 이 해를 계기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assertive) 대외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도광양회(道光養晦)’보다는 ‘유소작위(有所作為)’의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⁵ 2011년에 열린 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에 대해 언급하는 등 대립적인 모습을 노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은 주로 물질적 측면의 능력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 혹은 미중일 관계의 분석에 있어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두 이론의 연성권력이나 불만족도의 고려에서 나타나는 국제관계의 관념적 측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검토에 의해서 미중, 미중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민주평화론, 문명충돌론, 탈식민주의론을 통한 고찰이 바로 그러한 시도라고 할 것이다.

III. 관념적 측면

1. 민주평화론/문명충돌론

냉전의 종언과 9·11은 기존의 물질적 구조 중심의 체제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과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가의 정치체제와 전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민주평화론은 기존의 체제수준 이론과는 다른 단위수준의 논의를 제공하였다. 민주주의와 평화 사이의 긍정적인 인

⁵ 하지만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중국문제를 연구하는 존스톤(Johnston, 2011)은 한 세미나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야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중국은 주권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2010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과관계를 주장하는 민주평화론은 칸트(Kant)의 영구평화를 위한 공화정에 대한 규범적 강조와 민주정체 사이의 전쟁 부재라는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다. 이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산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축이라는 미국의 21세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⁶

이러한 미국의 관념적 전략의 지역적/세계적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 미일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관계를 확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적/세계적인 공동안보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미일동맹은 미영동맹과 같이 '특수한' 국가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⁷ 미일동맹은 또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광역 다자주의, 즉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근간을 이룬다. 나우(Nau)는 중국의 부상과 민주국가들 사이의 안보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등장이라는 동아시아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미국에게 요구되며, 이는 국내정치적인 정체성에 있어 좀 더 큰 유사성을 가진 핵심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어 상이한 정치문화 사이에서 안정된 세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다자주의 전략은 첫 번째는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두 번째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순서로 안보관계를 다자화하는 동심원적인 성격을 갖는다(Nau, 2002).

민주평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이행은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책결정 엘리트에 의한 위협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평화론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부재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대항균형의 의도를 갖게끔 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Owen,

⁶ 부시(G.W. Bush) 행정부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장했던 자유의 서클(circle of freedom) 논의는 민주평화론의 구체적인 정책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21세기의 애치슨으로 간주하는 라이스는 세계를 민주주의 국가군, 민주화 과정의 국가군, 그리고 비민주국가군으로 구분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를 심화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미 외교정책의 임무라고 지적하였다(Ha, 2005).

⁷ 그러나 영국학자인 휴즈(Hughes, 2007)는 일본을 '극동의 영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한다. 즉 일본은 반테러전과 같은 미국과의 탈냉전적인 안보협력을 실제로는 자신의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2001/2002).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가 중국의 인권이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외부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측면 역시 존재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존재와 민주화 과정이 갖는 영향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스나이더(Snyder, 2000)는 민주화가 호전적인 대외정책의 채택으로 이어져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했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나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등장하여 대내외적인 불안정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아차야(Acharya, 2010)는 이와 같은 논의가 경제개혁이나 긍정적인 민족주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같은 민주화 과정과 불안정성 사이에 위치하는 완화 효과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가 지역 내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린드(Lind, 2011)도 동아시아의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나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현상변경이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반박하고 있다.

탈냉전의 세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갈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서구 이론은 문명충돌론이라고 할 것이다. 헌팅턴(Huntington, 1996)이 주장한 이 이론은 냉전의 종언 이후 문명/문화적인 요소가 세계적인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문명의 충돌이 기존의 진영, 국가 간 충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서구 문명의 쇠퇴에 따른 문명의 권력이동(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서구문명에 대항하여 중국과 이슬람 문명이 강력히 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문명충돌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명충돌론은 한편으로는 서구주도의 국제화/세계화의 결과로서 보편적 지구문명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좌절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 이후 새로운 적을 찾아 미국의 패권적인 대외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미국 내 강경보수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적 고안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강정인, 2004).

최근에 이르러 9·11 이후 대테러전의 전개에 따른 이슬람과의 대립 양상이 완화되고 중국의 부상은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문명충돌 논의의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헌팅턴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후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치적 통합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패권국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것은 1500년 이후 세계에 등장한 모든 패권국들을 초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이슬람 문명과 연대하여 기존의 패권인 서구 문명, 특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중국에 의한 지배질서는 근대국제체제/사회와는 다른 문명국가와 새로운 조공체제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하고(Jacques, 2009), 그와 반대로 중화사상에 기반한 중국적 세계질서가 갖는 '내재화된 위선', 즉 현실주의적 측면의 존재가 지적되기도 한다(박홍서, 2010).

문명 간 충돌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와 공존을 주장하는 다양한 반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전 대통령 하타미는 이슬람과 유럽 문명 사이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대화가 바람직한 것은 그것이 자유와 자유로운 의지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상대에게 어떤 의견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서는 상대도 역시 독립된 개인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하며, 상대가 갖는 독립된 주의 주장과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고대하는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예비적인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Khatami, 2002: 41).

신유교주의를 주창하는 학자인 뚜웨이밍도 한 인터뷰에서 동양과 서양 문명 간 대화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문명의 대화에는 인류문명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명의 대화는 평등과 차이를 인정하거든요. 평등이 없다면 대화를 위한 공통의 기초가 없는 것이고, 차이가 없다면 대화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평등이 문명 간의 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준다면 차이는 이 공동의 사업을 더욱 설득력 있고 필요하며 제창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대화에 주력하는 가교자로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공동의 가치가 존재하며, 바로 이러한 가치가 우리를 하나로 연계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Du, 2006: 86).

하지만 독일의 평화학자인 뮐러는 문명의 공존을 강조하면서도 서구의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 아시아의

미래는 문명충돌이 아니라 국가주의에 의한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다.

국가주의는 아시아에서 폭력적이고 또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국가주의의 종착역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아시아판 1914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명적인 외세의 개입과 함께 파멸의 화염이 아시아 대륙을 뒤덮을 것이다. 아시아가 이 비극을 피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서구가 보여준 두 모범인 다자주의와 민주화 추진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Müller, 1996: 182).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예견되는 중국의 미래이다.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열등감 콤플렉스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협력적인 자세와 조야한 국가주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과시는 여러 면에서 빌헬름 시대의 독일을 상기시킨다. 중국처럼 19세기 정치의 원칙을 아직도 근본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는 강대국은 없다. 또 베이징은 중국의 관여 없이 생겨난 국제법의 규칙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교역 정책에서 해양권까지, 군비통제부터 지적 소유권 원칙까지 중국은 계속 자신만의 독자적인 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가 이웃 나라를 불안하게 한다. 세력이 충분해지면, 이웃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것인가? 빌헬름 시대의 독일이 거대하게 증폭되어 아시아에서 되살아날 것인가?(Müller, 1996: 159)

이와 같은 시각이 보여주는 서구중심성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반박의 논리를 제공하는 이론이 아래에서 서술되는 탈식민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탈식민주의론

민주평화론과 문명충돌론이 서구 학자들이 제시하는 관념적 이론이라면 탈식민주의론은 비서구의 주장을 대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식 권력의 식민주의적 형태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다. 탈식민주의적 논의는 세계를 이해하는 서구 중심적 논리와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보여주며, 제3세계의 특성을 인식하는 안보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이론가로 꼽히는 사이드(Said)의 『오리엔탈리즘』은 중동과 아시아가 서구의 소설, 전기, 예술작품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를 통해 동양을 대상으로 하는 서양의 논의가 갖는 선입관 내지는 편견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Baylis et al., 2012: 11장). 강정인은 문명충돌론 자체가 “새로운 냉전질서의 구축에 봉사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무장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강정인, 2004: 567).

식민주의, 특히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 의한 식민주의를 경험한 동아시아는 독특한 탈식민주의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근현대사의 해석과 민족주의의 역할에 대한 각 국가의 인식과 연관된다. 하지만 역사와 민족주의의 문제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진주만에서 시작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로 끝났다고 보는 일본의 견해는 1931년의 만주사변을 2차 대전의 시작으로 보는 중국의 시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Satoh, 2006).⁸ 이러한 점에서 중일 간의 역사 해석과 그에 연관된 중국 민족주의의 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Hoshiyama, 2008).⁹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민주평화론과 문명충돌론은 모두 이에 관해 중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적인 미중일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국이 제시하는 자유주의적 평화의 논리와 탈식민주의적 성찰의 결합을 통해 세 나라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초국가적인 상호비판과 자기성찰, 그리고 그에 따른 역사 인식의 공유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적 신념, 위협인식, 그리고 외교정책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Gries et al., 2009),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요인과 관념적 요인의 동시적 고려를 통한 안보적 위협의 고찰이 요구된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위협균형론과 위협전이론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⁸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 또한 현대사의 해석에 있어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⁹ 학자들 사이의 중일 관계와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보려면 헤(He, 2007)와 그리즈(Gries, 2005)를 참조할 것. 헤가 민족주의를 기본적으로 엘리트 중심적인 것으로 보는데 비해 그리즈는 좀 더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강조한다.

것이다.

IV. 통합적 이론

1. 위협균형론

세력균형론의 주장과는 달리 위협균형론은 국가들이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협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적의가 국가 능력의 분포와 그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생겨난다는 신현실주의의 입장과는 달리 개별국가의 정체성과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중시되며, 이는 관념적 변수에 대한 검토와 구성주의 혹은 신고전적 현실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위협균형론자인 월트(Walt)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균형과 편승은 대개 능력의 견지에서 정해진다. 균형은 약한 편과의 연합이고 편승은 강한 편과의 연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화는 국가지도자들이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비록 세력이 이 방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더욱 더 큰 위협을 부과하는 대외적 세력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들은 약한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 좀 더 위협적이라면 다른 강력한 국가와 동맹함으로써 균형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Walt, 1987: 21-22).

이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과 그것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항동맹 형성의 가능성이 제시되며, 그 결과로서의 균형, 즉 소극적인 평화(cold peace)가 도래한다는 추론이 행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물질적 능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세력의 전환이 아니라 중국 혹은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위협적인가의 문제이며, 이는 최근 빈번하게 거론되는 중국위협론의 논의에 해당한다. 영국 학자인 램프턴(Lampton, 1998)은 1998년의 논문에서 중국위협론의 기저를 이루는 다음의 11가지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틀렸거나 과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1. 중국은 패권적 야심을 가진 강대국가이다.
2. 중국은 대규모의 군사증강을 진행하고 있다.
3. 타이완 지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4. 중국은 다음번 아시아 경제위기의 대상국이다.
5.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은 근본적으로 서구의 실업 문제를 야기한다.
6. 중국은 미 기업의 파산요인을 제공한다.
7. 중국은 세계최대의 지적도둑이다.
8.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다.
9. 중국은 홍콩을 망가뜨리고 있다.
10. 중국은 워싱턴 로비게임의 효율적인 주요 행위자이다.
11. 중국은 환경재난의 진원지이다.¹⁰

하지만 이후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가 가속화되고, 위에서 언급된 중국의 적극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거론되면서 중국위협론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위협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한 연구는 인식(perception) 변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시아 주변국들이 중국의 부상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가 곧 위협인식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선호에 따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서진영·강수정, 2008). 미중일 세 나라 중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중국위협론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논의의 대상국인 중국은 물론 이를 중국포위론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전문가 집단의 미 대중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심화시키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갖는 반패권 의식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Chen, 2003; 서정경, 2008).

중국위협론은 국제정치이론의 공격적 현실주의-방어적 현실주의 논쟁에 연결된다. 즉 중국이 공격적 현실주의자/현상변경 국가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¹⁰ 이 11가지의 주장을 현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다. 왕(Wang, 2004)은 중국 제국의 역사적 사례를 원용하여 현재의 중국이 갖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펑(Feng, 2005)은 모택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기본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자였으나, 관념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격적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존스톤(Johnston, 2003)은 이전 저서(Johnston, 1995)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로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중국위협 의 실재 여부는 미중일 관계의 각각의 양자관계의 전개 양상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미중 관계와 함께 중일 관계의 변수가 중요한 것이며, 위협의 균형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일본의 인식과 정책이 갖는 변수적 위치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중앙당학교의 교수인 먼(Men, 2010: 82)은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이 그들의 이익과 책임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국민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전략적 선택에 따라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일본의 선택에 대해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공격적인 균형을 취하거나 중국에 편승하기보다는 ‘제한된 균형자(circumscribed balancer)’로 행동할 것이라는 분석(Twomey, 2000)과,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공동체 사이에서 재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견해(손열, 2010) 등의 탄력적인 예측이 존재하고 있다.

2. 위협전이론

세력의 전이와는 달리 위협의 전이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위협에서 다른 위협으로의 위협의 투사(projection)에 의한 전이가 가능할 수도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협전이는 비판적 안보연구가 제시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의 주장과 연결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안보는 무엇이 보호되어야 할 핵심적인 대상인가, 그리고 그 위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의 문제에 대한 발화행위(speech act)이며,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Taureck, 2006; Waever, 1995). 따라서 안보의 대상과 위협의 소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수정주의적 시각을 가진 미국의 학자들은 미국이 자신의 대외관계에 있어 적을 만들어 온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오렌(Oren, 2003)은 제국 독일, 나치 독일, 스탈린의 소련으로의 적 만들기의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면서 미국 정치학이 갖는 담론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으며, 커밍스와 다른 학자들(Cummings et al., 2004)은 북한, 이란, 시리아가 ‘악의 축’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냉전의 종언 이후 핵확산, 테러리즘을 거쳐 중국의 부상에 대해 위협인식을 투사한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을 객관화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 중에는 중국이 미국과 상대적인 안보협력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미, 중이 협력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대립 구도 형성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할과 중국의 국내정치적 역학의 문제이다. 즉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 투사와 이에 대한 일본의 동조 내지는 축진이 중국의 권위주의 내지 공격적 민족주의 성향 강화의 토양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민주평화론보다는 문명충돌론의 방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실현되는 일종의 양면 안보딜레마(two-level security dilemma)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 일과 중국에 의한 위협의 상호투사에 따른 균형 상태는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특성상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보다는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체제적 조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미중일 관계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 일본의 선택, 그리고 중국의 국내정치라는 변수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예견되며, 2012년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국위협론의 내용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그다지 낙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정치의 전개에 있어서는 세력보다는 위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균형보다는 전이의 전망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물질적 측면과 함께 관념적 측면을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환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위협전이론에 대한 시론적인 논의를 제시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미중일 관계에 있어 관념적 요인이 갖는 갈등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이론화의 작업과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의 도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2년 5월 7일 | 심사일: 2012년 5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7일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강정인. 2004. “문명충돌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 강택구. 2008. “동아시아 지역 내 강대국간 경쟁과 세력전이: 21세기 중국의 대일정책.” 『국제정치논총』 48권 2호.
- 김우상. 2004. “세력전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 김태현. 2004. “세력균형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 박홍서. 2010. “내재화된 위선?: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50권 4호.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세계정치 5: 세계정치와 제국』,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정경. 2008. “중국의 부상과 대미 인식의 변화: 중국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4권 2호.
- _____. 2010.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관계: 중국의 해양대국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권 2호.
- 서진영·강수정. 2008.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48권 1호.
- 손열. 2010. “동맹과 공동체 사이의 일본: 21세기 권력이동과 재균형의 모색.” 『일본연구논총』 31권.
- 신옥희. 2002. “냉전기 미일동맹의 정치경제, 1954-1960: 일본의 역할.” 문정인·오코노기 마사오 편. 『시장, 국가, 국제체제』, 아연출판부.
- 차도희. 2012.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쟁탈전』, 북코리아.
- Acharya, A. 2010. “Democracy or Death? Will Democratization Bring Greater Regional Instability to East Asia?” *The Pacific Review* 23, 3.
- Altman, R. 2009. “Globalization in Retreat: Further Geopolitical Consequence of the

- Financial Crisis.” *Foreign Affairs* 88, 4.
- Baylis, J. et al. 저. 하영선 역. 2012. 『세계정치론』(제5판). 을유문화사.
- Calder, K. 198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 4.
- Chan, S. 2005. “Is There a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U. S. and China? The Different Faces of National Power.” *Asian Survey* 45, 5.
- Chen, R. 2003. “China Perceives America: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2.
- Cumings, B. et al. 저. 차문석 역. 2004. 『악의 축의 발명: 미국의 북한, 이란, 시리아 때리기』. 지식의 풍경.
- Dittmer, 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 4.
- Du, W. 저. 김태성 역. 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 Feng, H. 2005. “The Operational Code of Mao Zedong: Defensive or Offensive Realist?” *Security Studies* 14, 4.
- Foot, R. 2009/2010.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etween Cold and Warm Peace.” *Survival* 51, 6.
- Friedberg, A. 2005. “The Future of U. S. - 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 2.
- Garrett, G. 2010. “G2 in G20: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lobal Policy* 1, 1.
- Goldman Sachs. 2007. *BRICs and beyond*.
- Gries, P. 2005. “Nationalism, Indignation and China’s Japan Policy.” *SAIS Review* 25, 2.
- Gries, P. et al. 2009. “Historical Beliefs and the Perception of Threat in Northeast Asia: Colonialism, the Tributary System, and China-Japan-Kore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Pacific* 9.
- Halper, S. 2010.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Basic Books.
- He, Y. 2007. “History, Chinese Nationalism and the Emerging Sino-Japanese Conflic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
- Hoshiyama, T. 2008. “New Japan-China Relations and the Corresponding of the

- United States — History, Values, Realism in a Changing World.” *Asia-Pacific Review* 15, 2.
- Hughes, S. 2007. “Not quite the ‘Great Britain of the Far East’: Japan’s Security,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War on Terror’ in East Asi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0, 2.
- Huntington, S.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 Schuster.
- Jacques, M.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Rise of the Middle Kingdom an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llen Lane.
- Johnston, A. 1995.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27, 4.
- Kennedy, P. 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Random House.
- Khatami, S. 저. 이희수 역. 2002. 『문명의 대화』. 지식여행.
- Lampton, D. 1998. “China.” *Foreign Policy* 110.
- Lee, G. 2010. “The Clash of Soft Powers Between China and Japan: Synergy and Dilemmas of Six-Party Talks.” *Asian Perspective* 34, 2.
- Lind, J. 2011. “Democratization and Stability in East As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
- Mahbubani, K.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PublicAffairs.
- Mearsheimer, J.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1.
- Men, H. 2010. “East Asian Order Formation and Sino-Japanese Relation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7, 1.
- Müller, H. 저. 이영희 역. 1996. 『문명의 공존』. 푸른숲.
- Nau, H. 2002. *At Home Abroad: Identity and Power in American Foreign Policy*. Cornell University Press.
- Oren, I. 2003. *Our Enemies and US: America’s Rivalries and the Making of Political Sc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 Owen, J. 2001/2002.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U. S. Primacy.” *International*

- Security 26, 3.
- Ross, R. 1999. "The Geography of the Peace: Great Power Stability in Twenty-first 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 4.
- _____. 2006. "Balance of Power Politics and the Rise of China: Accommodation and Balancing in East Asia." *Security Studies* 15, 3.
- _____. 2009. *Chinese Security Policy: Structure, Power and Politics*. Routledge.
- Ruggie, J. 1992.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3.
- Russett, B. 1985.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 2.
- Satoh, H. 2006. *Japan and China: Reaching Reconciliation or Stuck in the Past?* Chatham House Asia Programme.
- Serra, N. and J. Stiglitz. 2008. *The Washington Consensus Reconsidered: Towards a New Global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Shalpen, J. and J. Laney. 2007. "Washington's Eastern Sunset." *Foreign Affairs* 86, 6.
- Snyder, J. 2000.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W. W. Norton & Company.
- Tammen, R. and J. Kugler. 2006. "Power Transition and China-US Conflic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
- Taureck, R. 2006. "Securitisation Theory and Securitisation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9.
- Twomey, C. 2000. "Japan, a Circumscribed Balancer: Building on Defensive Realism to Make Predictions about East Asian Security." *Security Studies* 9, 4.
- U. S. Department of Defence.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 Van Evera, S. 1990/1991. "Primed for Peace;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3.
- Waever, O. 1995. "Securitization and Desecuritization." In R. Lipschutz, ed. *On Secur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t, S.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Y. 2004. "Offensive Realism and the Rise of China." *Issues and Studies* 40, 1.
- Wendt, A.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3.

Yang, J. 2010. "Japan's Decline Relative to China: Scenarios and Implication for East Asia." *Political Science* 62, 2.

Zhu, Z. 2005. "Power Transition and U. S. — China Relations: Is War Inevitabl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2, 1.

세미나 및 학술회의 발표문

Ha, Y. 2005. "Transformation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US Centric vs. China Centric." The Changing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East Asia Conference. 2005. 12. 1.

Johnston, A. 2011. "Chinese Foreign Policy in 2010: How Assertive Is 'Assertive?'" MacArthur Semina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5. 26.

신문기사

『매일경제』(11/04/27).

인터넷 웹 사이트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milexdata.sipri.org>(검색일: 2012. 4. 15).

World Bank Database.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2. 4. 15).

Abstrac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ospects for US-China-Japan Relations: Balance-of-Threat/Threat Transition Theories as Integrative Approaches

Wookhee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u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depend on the prospects of US-China-Japan relations: a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combines US-China, US-Japan, and China-Japan bilateral relations. While post-Cold War US-China relations show the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US-Japan relations present a continuity of cooperation, and China-Japan relations expo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nd synthesize theoretical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and made predictions about it. Firstly, it deals with balance-of-power and power transition theories that focus on the change and result of the material capabilities of these three states. Secondly, it examines democratic peace, clash of civilizations, and post-colonial theories emphasizing their ideational aspects and application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Lastly, it considers balance-of-threat and threat transition theories which integrate material and ideational factors, and points out the relevance of threat transition theory in predicting the prospects for US-China-Japan relations.

Keywords | US-China-Japan relations, balance of power, power transition, democratic peace, clash of civilizations, post-colonialism, balance of threat, threat transition